

성차별 문제

1. 성차별의 정의

성차별이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에 기반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으로 사회적 관습에 의해 강하게 형성된 신념으로 전통적 관념에 기반하여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독특한 억압상태를 가리킨다.

또한 성차별이란 남녀간의 불평등한 제도적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이데올로기 체제라고 규정 지을 수 있고 성차별은 이론화 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행동과 정치적 활동을 조장하는 사회적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능을 한다.

2. 성차별의 현황

1) 문화적 차별

우리 나라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문화적 차별은 출생시부터 시작한다. 유교적 가부장 제의 영향으로 인해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고, 때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성을 선택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 성비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일단 태어난 경우, 사회화 과정에서 차별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으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유교의 남·녀차별 사상에 입각한 성역할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성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 출생성비 국제비교(1994) > 국가 성비 (%)
< 연령별 남아선호 경향(1995) > 합계 비율 (%)
전체 40.4 20대 25.9 30대 36.1 40대 42.3 50대 이상 61.8

2) 교육적 차별

우리 나라의 국민교육 수준은 1980년대 중반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이비 존재하고 있는 성별 차이는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상급학교 진학률의 경우에 남녀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여자의 진학률이 남자에 비해 낮아 여성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더욱 차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교육은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여성의 고등교육의 진척은 미진하다.

< 국민의 성별 학력 분포(1995) > (%)

3) 경제활동 및 고용 측면에서의 차별

사회적 경제활동 면에서 성별 불평등 차별이 고정화되고 구조화되었다. 한국의 노동 시장 구조에서는 성직 요인이 노동 시장 분절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직,

(1995 ECL)

수평적 성차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 취업은 상대적으로 학력 과 임금 수준이 높은 행정 관리, 전문 기술직종에 제한되어 있으며 학력과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 판매직에 집중되어 있다

. 여성 노동은 남성에 비해 보조적이며 부차적인 것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생산한다는 사회인식을 이용하여 여성 노동자에 대해 실제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1970~1996) > (%)

< 여성의 임금수준(1975~1996) > 남성에 100(%)일때 연도 임금수준

< 여성 취업 인구의 직종별 분포(1996) > 직종 비율 (%)

임업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 3.1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9.2 사무직 15.7 서비스 판매직 31.2 기타(생산직, 농업수산업 등) 40.8

4) 정치적 차별

정치가 남성의 영역이 되어 여성이 정치적으로 배제되는 원인으로 사회적 성별 분업과 자본주의 정치의 성격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남성이 우위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점유하게 됨으로써 남성이 권력을 독점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연 여성은 정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여성의 정치 참여율은 현저히 낮고 실제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미약하다.

< 국회내 여성 국회의원 비율(1948~1996) > 여성 국회

의원 비율 1대 (1948) 0.5/4대 (1954) 1.3 /8대 (1968) 2.5/10대 (1976) 3.65/13대 (1988) 2.0 /15대 (1996) 3.3

5) 법적 차별

현 여성들의 위치를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법인데 이는 인간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볼 때 현재 우리 나라의 여성들은 가부장제에 기초를 둔 성차별적 성각의 법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남성 위주의 법은 가부장제를 유지, 확립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기에 여성은 더욱 부당한 피해를 당해야 했다.

< 개선을 필요로 하는 법안들 >

호주제도- 남계 혈통의 계승을 위한 호주제도를 없앨 것

부부의 결합관계- 남편 위주의 혼인 제도를 고칠 것

부모의 자녀양육 -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 위주의 친권제도를 고칠 것

성명- 부계쪽의 성과 글씨를 물려받은 자녀를 모계쪽도 이어받도록 고칠 것

3. 성차별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기능주의적 관점

* 원인: 여성에게 그릇된 사회화 과정에 의해 성차별의 희생자인 여성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며 남성의 여성지배와 여성의 의존적 성격을 깊이 내면화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열등성'은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의존적 성격 상호작용의 양식으로서 사회화되어 유지된다. 남녀의 이러한 지배-종속적 성질은 문화변화의 무심한 상호작용의 반복 속에서 의식되지 않은 채 은연중 강화되어 가는 것이다

* 해결방안

- 교육기관(학교)에서의 남녀의 역할에 대한 개사회화
- 여성의 자아실현(취업, 학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강화
- 여성관련 사회복지 제도의 개편
- 여성의 기회균등 보장

2) 갈등주의적 관점

* 원인: 사회적으로 남성이 지배하고 여성은 이에 종속되어 왔으며 성차별은 이런 불평등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남성들은 사회와 가정에서 자식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성역할은 점차로 변화하고 있으며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한 관계는 사라져야 한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그들의 성당할 역할에 참여당하거나 공정한 몫을 받지 못할 때 성차별은 이런 불평등을 여성들이 인식하고 성차별이 사회문제가 된다.

→ 성차별은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 해결방안

- 장기적- 변증법적 갈등주의

사회체제는 역사의 필연적 발전 과정에 따라 공산주의 사회체제로 귀착하게 될 것이고 그 이전 단계의 사회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 단기적- 혁명적인 사회체제의 개혁
- 기타방안- 성차별적 성격을 보완하고 있는 기존 제도의 개정

3)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 원인: 남녀간에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 성역할 문제가 사회문제화 한다고 보았다. 전통사회에서는 여성을 남성의 종속된 존재이고 수동적이며 가정에 애속되어 있고 남성에게 비해 모든 면에서 열등하다고 인식을 부여함으로써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합리화시켜 지배-종속적인 남녀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여성

→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조차 여성의 현실 자각이 일어나게 되어 전통적 관념의 여성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 해결방안

· 여성의 상징에 올바른 의미를 여가 동의할 수 있도록 사회화, 재사회화하고 이 에 따른 적절한 사회화 제도나 재사회화 제도를 확립하도록 한다.

· 여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 상징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지 않도록 사회진반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성격을 따고 인 모든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 여성에 대한 그릇된 상징에서 인위적인 이득을 제거해야 한다.

4) 교환주의적 관점

* 원인:

- 남녀의 성역할 분담관계에 있어서의 교환 불균형
- 남녀간의 지위 불평등으로 인한 교환 불균형
- 남성으로의 여성의 예측이 약화됨에 남성의 교환자원 가치 저하, 자원 부족

* 해결방안

-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가사노동의 사회화
- 남녀의 성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사회화, 이에 대한 제반제도 확립

5) 페미니즘

(1) 자유주의 페미니즘

*원인 :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능력주의 제도로 인해 성불평등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법적 불평등으로 인한 기회의 차단이 성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해결방안

- 참정권의 쟁취
- 교육의 평등
- 취업에서의 기회의 평등 달성

(2) 급진주의 페미니즘

*원인 : 남녀간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차이, 즉 여성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에 따른 남성
에 대한 여성의 의존이 성차별의 원인이다. 급진주의에서는 이러한 원인의 근원을 제도화된
가부장제로 보는데, 가부장제는 모든 문화권에 공통적이며 경제, 사회, 교육, 종교 등 모든
사회제도가 가부장제를 강화시킨다. 따라서 가부장제는 여성에 대한 억압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모든 기존 사회질서는 남성성리를 반영하여 기존사회는 남성적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남성적 사회질서와 여성에 대한 억압과 지배를 통해 남성을 만족시키고 남
성에게 이익을 준다.

*해결방안

- 여성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질서의 재조직화
-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의 기본
- 애정에서 레스비언이즘 주장

(3) 맑스주의 페미니즘

*원인 : 성차별의 문제를 계급관계의 결과로서 보는데, 즉 성차별의 문제를 남녀간의 문제
가 아니라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간의 기본적인 모순의 결과로서 파악한다. 그러므로
맑스주의 모형에서는 국가-특히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과 결합하여 여성의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여성 억압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결방안

- 사회적 소유의 폐지
- 여성의 생산에의 참여
-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를 주장함

(4) 사회주의 페미니즘

*원인 : 남녀간의 차이는 가부장제와 뿌리를 둔 성체계의 산물이며, 여성억압의 원인이 자
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여성의 억압은 한편으로는 맑스주의
의 지적처럼 계급억압 체계에 기인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본주의와 별도의 물질 기반을 갖
는 남선 지배체제고서 가부장제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해결방안

- 여성의 전통적 재생산 역할을 사회화하는 것
- 가족에 기반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국가의 소멸

4. 성차별에 대한 대응

1) 현행 정책

(1) 중앙 정부

가. 여성 특별 위원회

취업알선기능 강화,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인식제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양성평등체계의 구축,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성차별적 법·제도의 정비, 여성의 국제협력활동 강화, 여성단체운동 지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성인에 대한 남녀평등의식교육 확대, 육아휴직제의 정착

나. 행정 자치부

성인에 대한 남녀 평등의식교육 확대,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성차별적 법·제도의 정비

다. 재정 경제부

공무원양성 교육기관의 여성 교육기관 확대,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성차별적 법·제도의 정비

라. 교육부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학기회 확대, 여학생 진로지도 강화, 초·중등교원에 대한 남녀 평등의식교육 확대, 남녀평등한 교육과정의 구성, 취업모를 위한 학교급식의 실시 확대, 교육기관에의 여성진출 확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성차별적 법·제도의 정비

마. 문화 관광부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남녀평 등의식 제고를 위한 여건조성, 성차별적 법·제도의 정비

바. 노동부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강화와 건강증진, 여성근로자의 부당 해고 예방, 직장·가정 병존적 근무형태의 확산 및 내실화, 직선제 교육시설 설치 확대, 육아휴직제의 정착,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여성 취업알선 기능 강화, 여성 재고용의 활성화, 여성의 고용촉진의 적극적 유도, 고용상 남녀 차별제도 개선,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인식제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성차별적 법·제도의 정비

사. 보건 복지부

폭력에 의한 피해여성, 가족의 보살,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노인을 위한 긴 강 및 복지증진, 여성의 연금 수급권 확대,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선도대상여성의 사회복귀 지원, 미혼모 발생예방 및 대책수립, 청소년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의 확산,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 보육시설의 확충, 남아선호 사 상에 의한 성비불균형 해소,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화, 여성사회교육 지 원체계 구축, 여성사회교육기관의 기능 강화,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성차별적 법·제도의 정비

(2) 지방 행정기관

가. 서울 특별시

여성 위원회 설치·운영, 여성 발전 기금 조성, 여성 발전 센터, 여성 교양 대학, 부녀 교실 등을 운영하여 기술 교육, 생활 문화 교육 등을 실시

나. 부산 광역시

여성 정책 정보 제안 창구, 여성 정책 자문 위원회 운영, 여성 취업 정보 센터의 기능 확대, 여성 발전 기금 조성, 여성 부녀 센터 소개소 운영

다. 대구 광역시

여성 발전 기금 조성, 7급 행정직 공무원 여성 채용 목표제(2000년 까지 20%), 여성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 교육 실시, 부녀 상담 정보 제공, 취업 알선 창구 개선·운영

라. 인천 광역시 - 여성 정책 제안 창구 운영, 여성 자치 학교

마. 광주 광역시 - 여성 정책 정보 제안 창구, 광주 여성 발전 위원회 운영, 여성 발전 기금 조성, 주부 대학 운영

바. 경기도 - 「경기도 여성 농민 생활 센터」 설치·운영

사. 강원도 - 여성 발전 기금 설치·운영, 여성 취업 알선 창구 운영, 이동 여성 회관 운영 및 상설 이동 교육 실시

아. 충청북도 - 여성 회관 운영, 시·군·읍·면 상담 및 야간 보육시설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자. 충청남도 - 공직에의 여성 고용 목표제 도입, 보육시설의 확충,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 지도제 도입, 여성 발전 기금 운영, 여성 경제인의 기업활동 지원

차. 전라북도 - 정기 교향 강좌, 출판 제작, 여성 정책 위원회 운영

카. 전라남도 - 여성복지 세미나 개최, 여성 직업훈련 확대

타. 경상북도 - 여성회관 운영, 여성 대학 운영

파. 경상남도 - 여성 발전 기금 조성, 여성 단체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

하. 제주도 - 여성 발전 기금 조성, 여성 정보 종합 유통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성차별 개선을 위한 교육 확대

(3) 민간 단체

가. 한국 여성 개발원

- 21세기를 대비한 여성지도자 양성 및 능력 개발교육 실시
-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남녀평등교육 교육 실시
-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나. 한국 여성 민우회

<일하는 여성의 집>

- 직업능력개발교육
- 여성사회교육 - 취미, 교양교육
- 무료직업 안내와 취업알선 및 상담

<고용평등추진본부>

- 정책연구
- 여성인력정책 모니터
- 여성노동상담 - 직장내 성차별 문제를 상담, 지원
- 고용평등파수꾼

다. 한국 여성 단체 협의회

- 마스크 모니터링 활동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사업
- 근로여성 권익옹호활동
-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라. 한국 여성 단체 연합

- 여성권의 관련 입법 제·개정 운동
- 대안적 여성정책여론화 활동
- 과제별, 부문별, 지역별 여성운동 조직력 강화활동
- 여성정치참여 확대활동

마. 한국 여성 노동자 협의회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의식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일하는 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 부산 동래구 지역 '일하는 여성의 집' 위탁 운영
- 여성관련 법·제도 개선운동
- 일하는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

2) 평가

여성발전기금은 그 기금의 용도와 관리부처를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되는데,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마련함에 있어 사행령으로 이를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이 문제로 남게 될 것이며 특히 여성단체의 직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곧 지원하는 여성단체의 기준모호성과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와 공기업에 대한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도입 대상이나 적용비율이 낮게 책정되어 그 효과가 미흡하다. 현 정부의 여성관련 정책은 제도적으로 어느정도 외양을 갖춘 듯 하나 그것의 실효성은 의심스럽다. 여성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평등성과 지위향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원한다. 또한 IMF 이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5. 성차별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해결책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여권 관련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치의 여성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 평등 의식이 이루어지도록 고용 차별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직장 내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희롱의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 기간 동안에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장자리부터 남녀 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 남녀 평등 이념을 고집하고 여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공립 연수 기관 및 사회 교육 기관과 기업체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남녀 평등 의식을 재고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제도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 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 매체를 통해 남녀 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대안

(1) 기시적 차원- 국가, 지역 사회 수준

가. 경제적인 면

여성 취업 알선 서비스 강화 (무로 취업 알선 서비스의 확대 실시)

여성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서비스, 실직 여성을 위한 재취업 교육 실시, 민간 직업 훈련 기관에 대한 지원, 육아 휴직의 활성화,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영유아 보육 시설의 확충, 취업모를 위한 학교급식 실시 확대, 직장내 성차별 상담 서비스, 성차별적 법·제도의 개선, 방과후 아동 지도제(기혼 여성 인력 확대를 위한), 여성 고용 센터브제 (가산집제 또는 할당제)도입, 재택 근무제 확대 실시

나. 법적, 정치적인 면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치 참여 확대, 공무원 채용시 일정 인원의 여성 할당제, 여성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여성 만원 기관의 운영, 남녀 차별적인 법·제도의 지속적인 정비

다. 교육적인 면

중·고등학교의 남녀 공학 확대, 교육 내용(교과서)에서 남녀의 역할을 평등하게 구성, 남녀 평등한 교육 과정의 구성, 초·중등 교원에 대한 남녀 평등 의식 교육 확대, 여학생의 이공 계열 진학 기회 확대

라. 문화적인 면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 성감별 인공유산 단속 및 모성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

마. 기타 - 대중 매체의 성차별 과잉 노출 모니터링 활동), 여성 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

(2) 비시장적 차원- 개인, 가족적 차원

가족내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의 가족 제도는 남성 중심적 경제적 우위와 부계 혈통제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가 양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이해가 간과되기 쉽다. 따라서 부부간의 엄격히 고정화된 성역할 분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상으로도 여전히 남계 상속을 중시하는 호주 상속제와 부계상속제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성차별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전략

1) 여성 복지 관련법의 개정

우리의 현행 헌법에는 물론 남녀평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각종 하위법에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차별적 정책은 주로 공직부조 및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시 남편이 있는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남편과의 혼인 상태에서만 여성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재혼을 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사회 보장법에 나타난 성차별적 조항을 없애야 한다.

2) 현행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실시

성차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의 보완 및 확대실시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성의 과반과 관련하여 모든 여성의 기본적 욕구로 인 정되는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의료욕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임신부의 산전, 산후 진찰을 의료보험에 적용하도록 하고 분만수당도 제공해야 한다.

3)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

여성복지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복지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즉 요보호 여성은 물론 여장노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반 여성들이 경험하는 욕구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충족시킬수 있는 통로와 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장 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도표로 보는 통계』 통계청, 1997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최정재 나눔출판 1998
- 『사회 통계 조사 보고서』 통계청, 1996
- 『생활속의 통계』 통계청, 1997
- 『여성과 사회』 정윤진, 보성출판사, 1988
- 『여성사회학 : 성차별주의의 사회학적 분석』 박영숙, 한울, 1988
- 『여성과 사회』 이효재, 정우사, 1984
- 『여성학』 이화 여자 대학교, 1984
- 『여자는 왜? 여성억압의 어제와 오늘』 서진영, 동녘, 1991
- 『여성학 강의 : 한국 여성현실의 이해』 동녘, 1991
- 『여성 복지 관계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 여성 개발원, 1990
- 『여성과 성차별』 한국 여성 개발원, 1986
- 『여성과 발전』 한국 여성 개발원, 1984
-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한국 여성 개발원, 1992
- 『여성 인구의 특성과 변화』 한국 여성 개발원, 통계청 1997
- 『주요 경제 지표 해설』 통계청, 1997
- 『주요 경제 사회지표』 통계청(경제기획원), 1997
- 『통계 분석 자료 모음(1991~1997)』 통계청
- 『통계 분석 연구』 통계청, 1997
- <http://www.daeguwomen21.or.kr>
- <http://www.pcwa.go.kr>
- <http://kwwnet.org>
- <http://www.women21.or.kr/>
- <http://www.womenlink.or.kr/>
- <http://www.kwwnet.org>
- <http://www.feminet.or.kr>
- <http://www.kwominet.or.kr>